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난민역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중동전쟁 충격 대응...종료 시점 4월→5월 말로 늦춘다

영업용 심야 화물차·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달 면제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물가관리품목 23→43개로 확대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유류세 인하는 기존에는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도록 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

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 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

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식용유, 통신키, 고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공공요금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 부장으로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체본부도 중심으로 산업별로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이현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안하지만...전기절약 각별히 협조 당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중동전쟁 예측 불가, 고통 나누는 연대 절실

"2차 최고가격제 주유소 협조 부탁...담합·매점매석엔 엄정 대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 보여줘야...관성 벗어나 책임있게 현상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

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로,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

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전기 사용 관점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 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 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과 함께 고부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이 망라해서 담긴다. 또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고부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히도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

이재복 기자

祝 창간 19주년 세계타임즈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